

# 김혜정 교수, 직위해제…‘횡령’ 등 4개 비리 의혹

〈혜정박물관장〉

〈감사행정원 감사 결과〉

## 혜정박물관 논란

최승우 기자 dotori14@knu.ac.kr  
이승연 기자 leesy0177@knu.ac.kr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혜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 감사행정원(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김 교수는 횡령을 비롯한 4가지 비리의혹을 받아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된다.

김 교수가 받고 있는 첫 번째 의혹은 횡령이다. 혜정박물관은 작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세계 고지도로 본 동해’ 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가 전시업체에게 환급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총 976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혹은 기탁유물을 학교교비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혜정박물관의 유물을 기증된 유물 2,699건, 기탁유물 2,709건과 교비로 구입한 유물 193건까지 총 5601건으로 산출하고 있다. ‘기탁유물’은 김 관장의 ‘개인소유’이지만, 학교의 유물수장고에 보관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다른 유물처럼 활용될 수 있다.

## “비리의혹이 드러나 징계절차 진행, 징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기탁유물 30개를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캠퍼스 감사원 조성인 계장은 “기탁유물은 대학의 수장고에 있고 전시목적의 사용도 가능해 학교 측에서 구해야 살 필요가 없는 유물인데 김 관장이 학교 교비로 구매했다”며 “사립학교법 66조 4항에 따라 시효가 소멸한 건을 제외한 유물만 징계절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교 소유의 유물인 ‘기증유물’을 집으로 무단 반출하고 이를 잊어버린 점, 혜정박물관 직원 및 조교를 개인적인 일에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조 계장은 “감사결과 비리의혹이 드러나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 이고,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징계결과가 나와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언론보도에 나온 ‘보복성 징



## 사건 흐름

감사행정원 대학감사기간 감사실시 (1월 7일 ~ 4월 30일)

감사결과 조사보고서 작성 (6월 17일)

교무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7월 6일)

징계위원회 제청 (8월 13일)

징계위원회 징계요구 및 김혜정 교수 관장직 해제 (8월 20일)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당사자 소명 (9월 중 진행)

징계결정 (9월 중 진행)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 모든 운영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어떤 횡령도 없었다”며 “구입유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구입한 것이며, 기증유물 무단 유출도, 박물관 직원을 개인행사 인력으로 쓴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혜정박물관 운영 서류검토 결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김 관장은 본인에 대한 징계요구서에서 포함된 감사결과 내용 반박문과 직위해제와 징계절차 철회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서를 학교 측에 보낸 상황이다.

## 현재 혜정박물관은 정상 운영

## 수장고 유물은 봉인된 상태

학교 측과 김 관장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향후 혜정박물관 운영의 귀주가 주목받고 있다. 혜정박물관은 2002년 당시 조정원 전 총장과 김 교수와 맺은 ‘사료 기증에 대한 예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혜정박물관의 전시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논란 속 유물들이 보관된 수장고는 봉인된 상태다.

##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 발표, 우리학교 A등급 확정적

## 대학구조개혁 가집계 결과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우리학교는 지난 25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가집계 결과로 교육부로부터 ‘자율 감축’을 통보받았다. 이는 ‘사실상’ A등급을 의미한다.

대학구조개혁은 올해 3월 1단계 자체 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다.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에 따라 감축해야 될 정원의 비율 또한 달라진다.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B,C,D,E등급)을 받게 되는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낮은 등급을 받을수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의 비율이 늘어난다. 이번 가집계 결과 통보에서 등급을 명확하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리팀장은 “등급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정원감축에서 A등급에 해당되는 ‘자율감축’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A등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이 발표된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교육부는 반대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감축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또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부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개혁을 밀어붙일 ‘동력’ 자체는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교육여건 지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 팀장은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다행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1주기 실적을 2주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간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라는 김 교수의 언급에 대해 조 계장은 “이번 감사는 대학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혜정박물관 감사결과는 4월 30일 완료, 6월 17일 종장결재를 받아 7월 6일에 교무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후 8월 13일 종장제청을 거쳐 징계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수는 범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